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1. 거품인가, 실체인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내지 비판이 있다. 현재의 기술변화가 과연 ‘혁명’이라 부를 만큼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것이다. 거품이 아니냐는 것인데, 크게 세 개의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념의 문제,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새로운 현상이냐는 문제,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먼저 개념의 문제를 보면, 지금의 상황을 ‘혁명’이라 부르기에 사실 거품이 좀 끼어있다. 현재 얘기되는 신기술들은 아직 초기단계이거나 적용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혁명’을 말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신기술의 효과는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술변화의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혁명을 기다리며, 미리 혁명이란 개념을 ‘가불’해서 쓰는 셈이다. 거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국제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란 개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다른 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많이 진척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부나 언론 또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뒤쳐져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기술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 거품이 아니라 실체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봄, 이세돌과 알파고가 벌인 바둑 대결의 여파이다. 기계와 인간의 싸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인간 이세돌을 응원했다. 그런데 참패! 4차 산업혁명은 한국사회에 혁명적으로 다가왔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들 마음속에 실체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은 모두가 사회적 구성물들이다.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경험들 속에서 형성된다. 때문에 어떤 개념이 옳고 그른지 가리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

명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아니면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든(예컨대 ‘제2의 기계시대’) 별 문제는 없다. 개념적 논쟁보다는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맥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에 논쟁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한국사회에서 통념화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쟁점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현상들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냐는 문제이다. 지금의 기술변화는 과거부터 줄곧 진화해오는 기술적 연속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갑자기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거품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조심스러움이 특징인 학계에서는 ‘혁명론’보다는 ‘진화론적’ 입장이 강하다. 사실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한다는 수많은 기술들은 따지고 보면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전에 고안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컨셉은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된 것으로 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기술변화를 아무런 새것이 없는 거품으로 치부하기엔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다음의 두 가지는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먼저 기술발전의 사회적 영향이다. 여기서 기술적 ‘원조’와 범용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이나 이론들은 원조로 따지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 원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연구실에 있던 원조 로봇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기업에 적용되면 노동시장과 고용 및 근무형태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기술의 발전이 새롭게 느껴질 때는 원조의 시대가 아니라 변곡점을 지나 범용화 시대로 접어들 때이다. 지금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이 범용화 시대로 들어서는 길목인 듯싶다. 일상생활을 넘어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 생산직이나 사무직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ICT가 활용 안 되는 곳이 없으며, 그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 썸 되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며, 우리는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다. 이 사업모델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고객에게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택시 없는 택시회사(우버), 숙박시설 없는 숙박업체(에어비엔비), 매장 없는 유통기업(알리바바) 등 그 예는 수 없이 많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인 ‘연결’을 통해 단숨에 세계 굴지의 회사로 올라섰다. 그야말로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이동하는 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기업형태를 시장에서 몰아낼 ‘파괴적 혁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이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디지털 기술에 잠재된 파괴적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 추적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품-실체’ 논쟁의 세 번째 이슈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작동 여부이다. 실체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변영의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생산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을 높여 과연 높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체론자들과는 달리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1980년 중반 경제학자 솔로는 우리는 어디서나 컴퓨터를 볼 수 있으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혁신이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고든과 코웬과 같은 학자들도 이에 동조한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이 저하되는 통계자료는 차고 넘친다. 1970년대는 컴퓨터가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그런데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진 것이다. 이를 바라보면서 디지털 기술에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은 성장동력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거품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제2의 기계시대’의 저자 브린올프슨과 맥아피는 이를 강하게 반박한다. 이들은 지난 1890년대 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도 처음 20~30년 동안은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초기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경영방식과 작업조직, 관행 및 의식, 교육체계 등 주위의 많은 요소들이 같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활용한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만물이 디지털화되고 범용화되면서 기하급수적 성장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실체가 될지, 아니면 거품으로 끝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각 나라의 기술정책이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산업4.0,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한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는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와 적용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체든 거품이든 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은 이미 ‘디지털 전환’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디지털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를 별것 아닌 거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따라서 디지털화를 추적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만 한다.

2. 노동에 미치는 영향

기술을 생산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보유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래서 기술발전과 노동의 문제는 인류역사의 오랜 논쟁거리였으며,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인 측면은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쟁점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기술이 미치는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산업화시대에는 주로 생산직의 육체노동에 초점을 맞춘 ‘자동화’가 기술혁신의 대명사였다. 실제로 기술로 대체된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가 기술혁신의 대명사이다. 이는 그동안 자동화의 안전지대였던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들 업무의 핵심은 정보처리인데 이제 기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넘어 정신노동의 일자리까지 침범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제조업은 지난날 자동화시대에 잃어버릴 일자리는 거의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밖의 다른 직종이 타격을 받을 차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2013년 프레이와 오스본이 미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향후 10~20년 사이에 전체 직업의 47%가 컴퓨터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무직과 행정지원, 영업과 서비스 직종 등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자리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만큼 비판도 뒤따랐다. 비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는 기술적 가능성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기술은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적용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나 여러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이 같이 결부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47%라는 숫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구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직업에는 여러 다양한 직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화 되는 것은 그 중의 일부 직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개별적 직무는 몰라도 직업은 그렇게 쉽게 통째로 자동화될 수 없는 것인데, 프레이와 오스본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사라질 일자리도 많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도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술혁신의 시기마다 고용위기론이 대두되곤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진 이후의 연구들을 보면 결과는 상호 모순적이다. 한편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확인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현실적 신빙성이 없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불확실하더라도 일자리의 변화와 이동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육과 재교육이다.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를 위한 ‘교육복지’가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이다.

노동의 질적 측면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이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생기고, 단순노동이 아닌 높은 숙련의 일을 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형성되느냐는 것이다.

먼저 직업의 안정성부터 짚어보면 현실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대표적인 일자리는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필요할 때만 노동력을 부른다는 ‘온 디맨드’ 경제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란 즉,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늘 불안정한 상태임을 뜻한다. 또한 혹자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가 실현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이 쓰지 않는 차나 집, 각종 장비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를 ‘공유경제’라고 하기엔 낮이 뜨겁다.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화’ 된지 오래며,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을 맡기는 이른바 ‘클라우드 소싱’을 두고도 공유경제 또는 ‘집단지성’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다.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많은 군중들이 참여하고 지식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노동자들의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다.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다 이들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종 보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낮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내세우는 플랫폼은 ‘디지털 일용직’ 또는 ‘디지털 특고’를 양산하는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플랫폼 노동시장은 전 세계로 뻗어있어 경쟁은 세계화되고, 그만큼 노동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다음은 숙련 즉, 노동내용의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힘들고 지겨운 일들은 기계가 대신 해주고 인간은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직무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하다. 상호 연결된 디지털 기술체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조정할 수 있는 높은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숙련 일자리도 생겨나겠지만, 그 기술체계가 남겨놓은, 예컨대 로딩작업 같은 기계에 ‘봉사’하는 저숙련

노동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는 4차 혁명기술로 상층과 하층보다는 중간 숙련계층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느 업종에서나 중간 숙련의 일이 표준화 정도가 높아 알고리즘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숙련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보다는 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의 질적 측면 논쟁에서 자율성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혹자는 과거 수동적이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스스로 결정능력을 갖게 되면서 조직이 분권화되고, 이를 조정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임파워먼트’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적 조직문화가 발전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 자랑하는 사물인터넷, SNS, 웨어러블,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근무자들의 성과나 행동을 실시간으로 체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때문에 근무스트레스는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율성의 논쟁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일과 생활의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바일 노동이 가능해져 일과 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편에서의 주장이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가정 또는 다른 사적인 일들을 고려하면서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커녕 오히려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너져 ‘끝없는 노동’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또는 상관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유연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 지형으로 봐서 노동자의 자율성보다는 끝없는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미래를 위한 대안 : ‘큰 이야기’가 필요할 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모르겠다’는 것이다. 과연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올지, 고용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할지 아닐지, 노동자는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율적인 조직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등 노동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질문 중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모순적인 대답이 교차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시작단계라서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과

거를 통해 미래를 ‘점쳐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 과거에도 일자리가 줄지 않고 늘어났으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 이런 식이다. 가장 과학적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난무하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노동의 질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50~60년대 자동화 논쟁 때의 가설인 ‘숙련화’, ‘탈숙련화’ 및 ‘양극화’론이 재등장하여, 이 중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세계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상은 뭔가 새롭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논쟁과 대안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의 미래를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쓰인다고 하는데, 왜 그동안 노동의 인간화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른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노동은 기계화되기 시작한다. 일이 쉬워지면서 사용자는 저임금의 여성과 아이들을 고용하고 ‘고임금’의 남성노동자들을 쫓아낸다. 아빠는 실업자가 되어 기계를 때려 부수고(‘러다이트’ 운동) 엄마와 아이들이 노동전선에 서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2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에 잘 그려져 있다. 전기의 사용과 함께 대량생산-대량소비(‘포디즘’)의 시대를 열었으나 노동자는 컨베이어체계 속에서 단순한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게 된다. 1960년대 말 극소전자기술의 도입과 함께 일어난 3차 산업혁명도 노동의 인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컴퓨터와 자동화시스템을 다루는 고속련 노동자와 이 시스템에 종속, 봉사하는 저숙련 노동자가 공존하는 양극화시대를 만들었다. 분명히 기술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논쟁을 통해 얻은 성과가 하나 있다. 기술결정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한 점이다. 기술은 인간에게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기술혁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다. 기술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 분명히 기여할 수 있으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그 기회요소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일까?

여기서 ‘큰 이야기’가 필요해 보인다. 기술의 기회요소가 살아나지 못한 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술과 노동의 관계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수익성만을 염두에 뒀으로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인간화와는 거리가 멀게 가고 있다. 공유경제라 칭송했던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은 이미 수익사업으로 변해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플랫폼은 새로운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노동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양극화로 갈 개연성이 더 많아 보이고, 자율정보보다는 통제와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는, 끝없는 노동이 우리를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만드는 혐오스런 ‘노동사회’를 거부하는 시각이 대두된다. ‘탈노동 사회’를 그리는 것이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일자리를 지키려하지 말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려 하지 말자. 만들어봤자 나쁜 일자리일 테니까. 실업이 되면 기술세, 로봇세 등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갑질’까지 참아가면서 일하지 말고 ‘탈노동 사회’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는 충언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자본주의 노동사회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자 경종이다.

자본주의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그 때마다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창출하면서 위기의 파도를 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도 끝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양극화가 심화돼 소비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도 줄어드는 건 뻔한 이치이다.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하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적 성장의 결과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자원고갈, 생태계 교란 등 아예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울리히 벡은 이를 두고 성장사회가 만든 ‘위험사회’라 불렀다. 4차 산업혁명이 다시 지난날 자본주의 성장전략인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에 기초한다면 지구는 그 혁명과 함께 폭발해 버릴지 모른다. 최소한 에너지 발전원이 원전이나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컴퓨터와 자동화가 본격화되던, 즉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960년대 말, 에릭 프롬은 ‘희망의 혁명 - 인간적 기술을 향하여’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서두에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기계가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기술관료 사회로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휴머니즘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후자의 길로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결정 제도를 강력히 주장한다. 주식소유와 이익배당금은 결부시키되 의결권과는 연관시키지 말자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의결권은 기업의 직원, 노조와 소비자 및 지자체 대표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을 억제하고 기술의 반사회적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대안으로 과연 무엇이 합당할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현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해 보인다.